

#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 사회활동 지원 강화

### 전주시, 장애인복지 분야 1175억원 예산 편성... 공약 등 장애인복지정책 신규사업 추진

전주시는 올해 총 1175억 원이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돼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자립기반 확충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78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8.5억 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14.5억 원) 등은 일상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권역 재활병원과 전주시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시설도 건립될 예정이다.

이 시는 올해부터는 총 52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설계 및 착공 예정이고 오는 2025년까지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이동기기 충전시설 야외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 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하고, 장애수당 지급,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최종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옛 자립복지재단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등도 추진해 장애인복지 안

전망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 사회 참여 기회 위해 '제2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가족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켜 '일상에서 다 함께 누리는 신바람 복지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설 앞두고 이른 새벽 수험 위판장 찾은 시민들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를 10여 일 앞둔 10일 군산시 해방동 군산수험 위판장을 찾은 상인들이 열린 경매를 하고 있다.

# '촘촘한 치안 안전망 구축'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총력 전개

### 전북경찰청, 도민 체감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

전북경찰청은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평온한 가족의 만남 조성을 위해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펼친다.

강광수 전북경찰청장은 명절기간은 평소보다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중요범죄·가정폭력과 교통혼잡에 대비해 경찰 전 기능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 총력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설 명절 치안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각 기능별 세부 치안대책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생활안전 기능은, 빈틈 없는 상황관리와 함께 강력범죄 발생을 대비해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대표 취약요소인 금융기관·귀금속점·편의점 등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집중 실시한다.

또 경찰관기동대·방범협력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 기능은 연휴 전 확대에 방경할관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과 아동·노인학대 우려가정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고 연휴 중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긴급입시조치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

응할 방침이다.

교통 기능은 연휴 기간 중 전통시장·대형마트·공원묘지 등 주요 혼잡지역 중심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관리 및 귀성·귀경길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단계적 교통소통 활동의 1단계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15개소), 대형마트, 터미널 등 명절 혼잡장소 중심 경력배치, 교통관리이며, 2단계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북경찰청 교통상황실 운영, 고속도로 및 연계국도 귀성·귀경길 집중관리, 교통방송(TBN), VMS 등 활용 교통정보 제공이다.

형사 기능에선, 연휴 전후로 안정적인 치안 확보를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서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 예방·검거에 역량을 집중하고, 강절도는 재범율이 높은 만큼 신속검거를 통해 단속 강화할 예정이며, 고질적 악성 폭력이 일상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전개해 평온한 명절치안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강광수 전북경찰청장은 "연휴기간 동안 전북경찰 전 기능이 모든 역량을 집중,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성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저출산 문제 극복 '부모급여' 지급

### 기존 영아수당 개편 만0세~1세 아동 양육 부모에 지급

전주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시작했다.

시는 기존 '영아수당'이 2023년 새해부터는 '부모급여'로 개편돼 만0세~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 영아수당 대상가정에 더 많은 금액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 원이

지원된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세의 영아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금액이 적은 만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김현욱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공고

### 전주시,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로 지정 강화

전주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에 따라 2023년 전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신규 설치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는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이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장기요양지정심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다.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한

다.

이 과정에서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박은주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업무절차 명확화가 목적인 이번 공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지역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45곳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322곳 등 총 36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아영 기자

#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찾아가는 특별 예방·안내 돌입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해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 상반기 재선거(4.5)에 실시되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각 조합,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 일대일 방문·면담과 각종 계기시법규 및 위반사례안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안내 활동에 중점

을 두되,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여기에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1회 7건, 2회 11건이 고발된 상태로 3회 기준 인쇄물 관련 1건이 고발 조치됐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등의 선거법 준수 여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나 저수자에게는 적극 감면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재선거 관련은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미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최고 1억 원, 도내에서는 8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병역판정검사 일자 · 장소 본인선택으로 신청하세요"

12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으로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2023년 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전북지역 검사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5일,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2회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공식 범위내에서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일자와 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내일 전북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